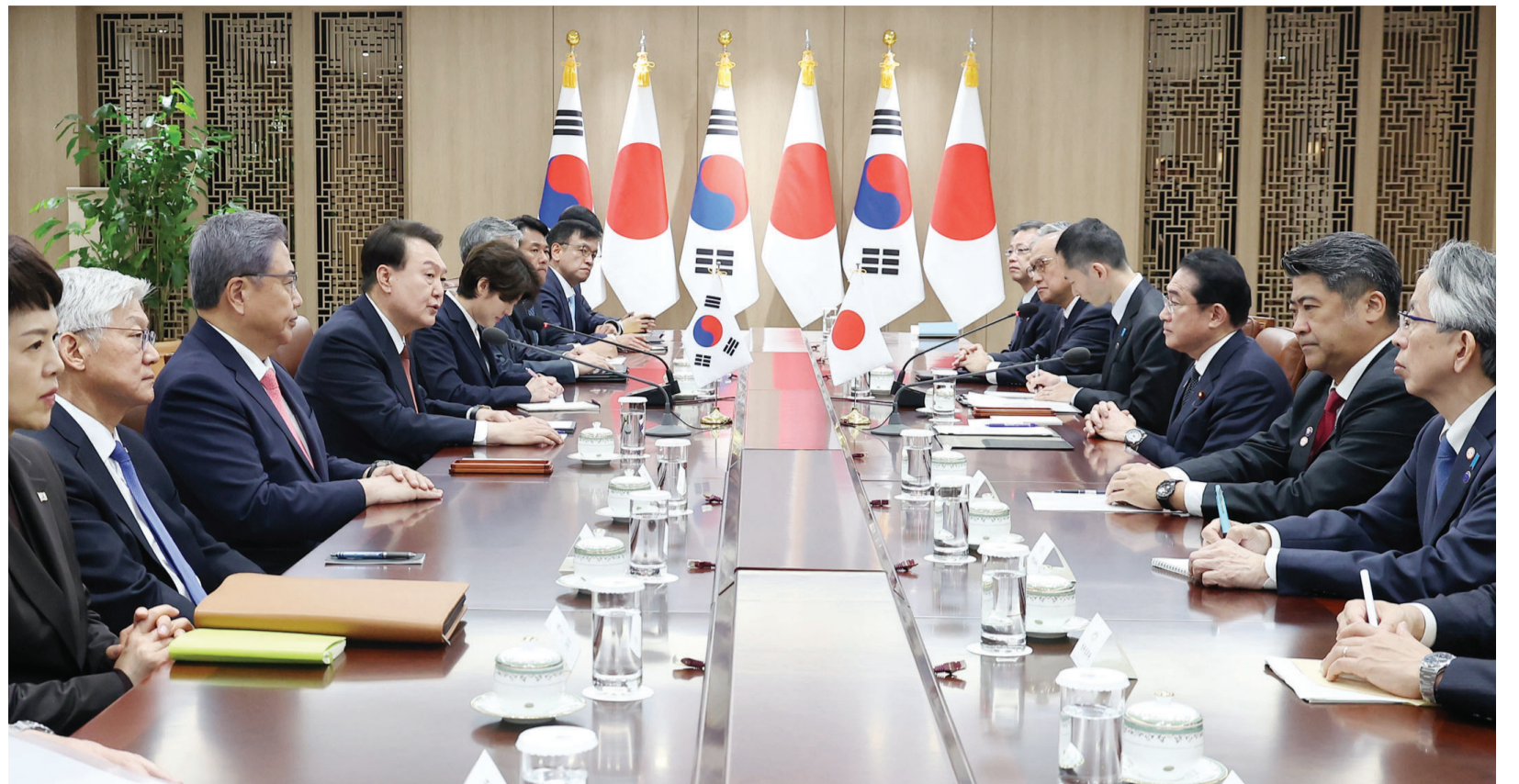


# 버티는 김재원·태영호...국힘 징계 수위 놓고 '속얇이'

당사자들 "자진사퇴 없다" 강경  
중징계는 당 내홍·반발 예상  
경징계는 여론 악화 '딜레마'  
심의 예고 오늘 최고위 연기될 듯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로 여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 소명을 듣고 이르면 당일, 늦어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내 기류라면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는 내년 총선 공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어서 매우 무거운 징계로 여겨진다. 김기현 대표 등 나머지 지도부 역시 여론 및 총선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징계 수위와 관련해 의견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핵심 인사는 "설사 당원권 정지 1년이 아닌 6개월이 나온다고 해도, 두 사람은 이미 총선 도전 명분을 잃었다고 보는 게 옳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리위 징계 심의가 다가오면서 지도부 내에서는 징계 수위를 두고 한층 복잡해진 속내가 엿보인다. '논란성 발언'만으로 중징계를 내리자니, 총선 공천 등 정치적 생명이 걸린 터라 거센 당사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민의 이유로 보인다. 이로 인한 내홍이 커진다면 내년 총선을 앞둔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경징계에 그칠 경우도 문제다. 아당에 공

격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숨방망이'라는 비판 여론에 중도중 지지세 확산에 걸림돌이 되면서 총선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중징계든 경징계든 당 지도부로서는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지도부 고민이 무색하게도, 두 최고위원은 주말 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 최고위원은 녹취 유출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력한 '소명 의지'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 핵심 인사'를 인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 반대 탄원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탄원 동참'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최고위원회의가 또다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직후인 지난 4일 당 최고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김 대표와 유재욱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리는 당 정책위원회 주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회의의 시간대를 감안하면 최고위 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이날은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 취소 배경을 일장성의 이 유라고 공식 설명하지만, 당 관계자들은 "(김·태 최고위원에게)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논란 당사자들이 공식 당 회의에 함께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구성원들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시다, 오늘 한일의원연맹 면담...정진석·윤호중 의원 참석

윤호중 "국민의 뜻 제대로 전달"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7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측과 면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8일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면담에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두 의원 외에도 연맹 부회장인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상임간사인 성일종(국민의힘)·김

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청 대상이었으나 일본 측과 협의·조정 과정에서 정 의원과 윤 의원 두 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라고 비판해온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윤 의원은 고심 끝에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면담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러 우려 여과절도 있었지만 국민 대표로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에선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적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던 만큼 이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항의' 차원에서 면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기시다 총리를 만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직접 요구하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 의원이 면담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후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간호법, 두번째 거부권이나 중재안 도출이나

국힘 여론 수렴·물밑 중재 주력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두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당과 간호법 절충안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로 마련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 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직역 간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가 커져서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아예 폐기될 경우 아무 것도 연지 못하는 만큼, 간호 협회가 '중재' 제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야 재협상이 시작되고 합의에 이르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사실상 처음 여야 협치를 이루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최근 새로 들어선 국민의힘 윤재욱·민주당 박광온 양 당 원내지도부가 협치 시연대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기류를 볼 때 이런 의도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당의 '절충안' 마련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역풍을 고려한 전략적 제스처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리 전제해 염연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자는 건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재외동포청 광주유치 무산...인천·서울 이원 설치 유력 소재지 결정 곧 발표

정부가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사실상 결정하고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8일 방한 일정이 끝난 뒤 내주 초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732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인 '재외동포청' 유치 의향서를 지난 3월 외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본부를 인천에 두되, 민원센터는 서울에 마련하는 '이원 설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廳)급 기관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한인 이민역사와 연관성 등을 내세워 재외동포청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해 왔다. 반면 외교부는 동포들에게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여론

조사 등 재외동포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서울을 희망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두루 고려해 이원 설치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재외동포청 관련 당정 협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징성, 해외동포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국토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등을 충족하는 곳으로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